

건설동향브리핑

제538호 (2015. 11. 30)

■ 정책 · 이슈

- 1996~2015년 간 건설산업 주요 이슈 변화 분석
- 효과적 건설기능인력 육성체계 구축방안 모색

■ 경영 · 정보

-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X)

■ 경제 동향

- 2016년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 거래 감소 전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혼란 부추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996~2015년 간 건설산업 주요 이슈 변화 분석¹⁾

- 건설기업 CEO 대상 설문 결과, 2010년 이후 최대 관심은 ‘입·낙찰 제도 개선’ -

■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규제’→2010년 이후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변화

- 해당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2010년 이후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는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었음.
- 2015년의 5대 이슈를 2010년과 비교해보면 2순위를 차지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제외하고 순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이슈는 유사함. 이는 공공공사 관련 제도를 제외하고 지난 5년 간 건설업계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함.
- 입·낙찰 제도의 경우 2010년에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 실시 예정에 따라 낙찰률 하락에 따른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2014~15년에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종합심사낙찰제도로 개선되고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업계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짐.
-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에 따라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2010년 이후 업계 최대의 화두로 부상함.

<건설산업 이슈의 변화(1996~2015)>

순위	1996년	2006년	2010년	2015년
1	국내 건설시장 개방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2	건설업 부도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중소 업계 간 양극화 해소	적정공사비 확보
3	건설업 담합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4	부실시공	대중소 업계 간 양극화 해소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지역 중소업체 보호
5	해외건설시장 진출	해외건설시장 진출	건설업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 주택시장 잔존규제 완화
기타	-	이미지 개선, 윤리경영, 국내 신건설시장 개척	해외건설시장 진출, 녹색·저탄소 분야 개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건설산업 미래 전망, 긍정적('96)→부정적('06)→중도적('10)→부정적('15)으로 변화

- 국내 건설시장 규모에 대해 응답한 건설 CEO들의 인식을 보면, 최근 수년 간 시장이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국내 건설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주요 이슈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 강해짐.

- 이를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199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우 낙관적이거나 혹은 낙관적 (시장 규모의 확대 추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0~50% 내외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는 시장의 확대 추세를 전망하는 CEO는 9%에 지나지 않으며, 총 응답자의 73.1%는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함.
-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와 같은 전망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남으로써 향후 산업 구조조정, 신사업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수주 확보를 위한 요구 및 기업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생존전략으로는 ‘수익성 위주 선별 수주’가 최우선, ‘원가절감’ 중요성도 부상

-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생존전략으로는 2001년 이후 15년 간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가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선정됨.
-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도 중요한 전략으로 지적되어 ‘수익성’이 향후 건설기업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임을 드러냄.
- 해외시장 진출은 2010년 조사에서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2010년의 경우 20.2%를 차지하던 응답률이 2015년에는 7.5%에 불과하여 무려 12.7%p나 하락함.
-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경감한 것은 2012년 이후 저가 수주에 따른 어닝 쇼크와 최근 주택시장의 재부상에 따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회사의 지속 성장’이 건설기업 CEO 최고의 자긍심

- 건설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15년 동안 변함없이 흑자 시현으로 회사가 성장하였을 때이며, 이러한 응답은 미미하나마 비중이 더욱 높아졌음.
- 이는 지난 수년 간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익성 시현을 통한 업체의 성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풀이됨.
- 다음 2, 3, 4위가 모두 국내외 완공 시설물에 대한 입주민과 대중의 감사라는 점에 비취볼 때, 건설 CEO로서의 자긍심은 자신의 직위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자신이 CEO로 있는 기업이 수행한 ‘일’에 대한 보람이 곧 자긍심이 되고 있음을 시사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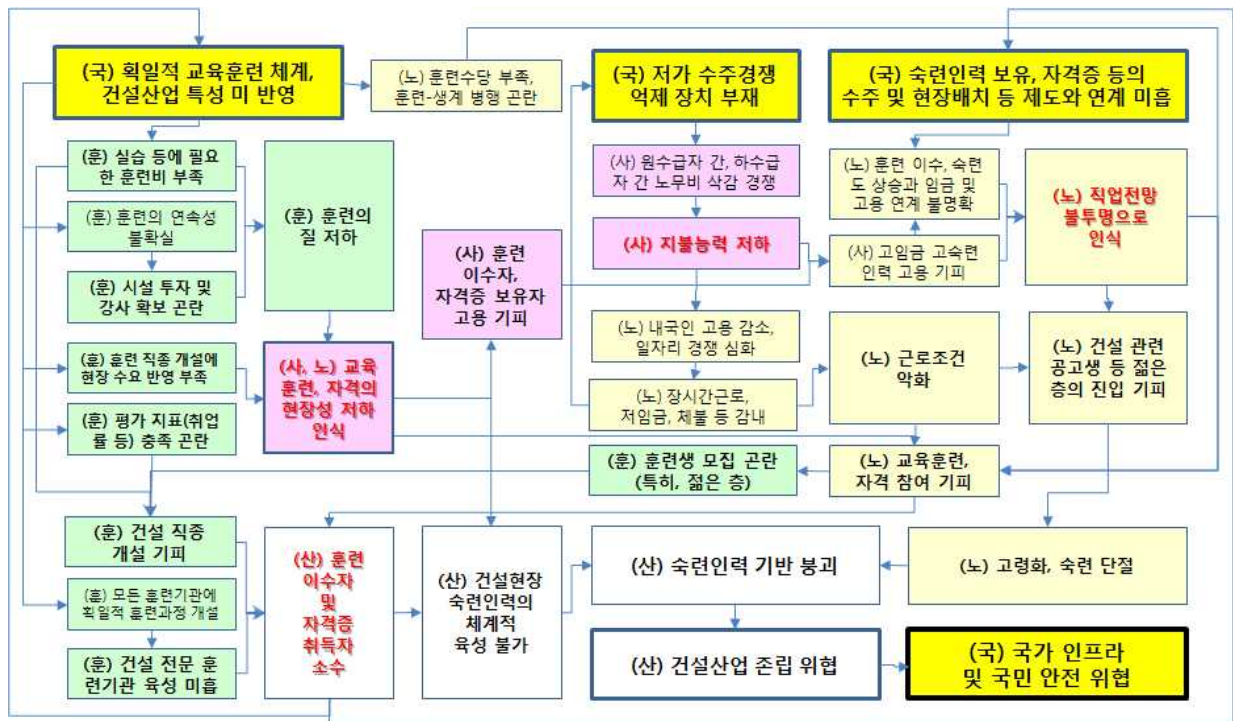
효과적 건설기능인력 육성체계 구축방안 모색¹⁾

- 건설산업 차원 주도, 임금지불능력 확보, 기능인력 보유 인센티브 부여 등 -

■ 현행 교육훈련 체계, 직업전망 및 현장성 부재에 따른 악순환 구조로 문제점 많아

- 현행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체계의 문제점은 현장성 저하로 인한 사업주의 무관심과 직업전망 부재로 인한 근로자의 참여 저조가 결합된 악순환 구조로 요약할 수 있음.
 - 현장성 저하는 현장 실습 부재, 고가 재료비 미반영, 현장 필요 직종 및 직무 반영 미흡 등에서 기인. 직업전망 부재는 고숙련자에게 제공해야 할 임금지불능력 및 합당한 고용안정 부족과 기능인력 보유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등에 기인함.
 - 따라서 궁극적인 3대 핵심 요인은 건설산업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인 교육훈련 체계, 저가 수주경쟁 억제 장치 부재, 기능인력 고용 인센티브 규정 부재 등임.

<현행 교육훈련 체계의 문제점 : 직업전망 및 현장성 부재로 인한 악순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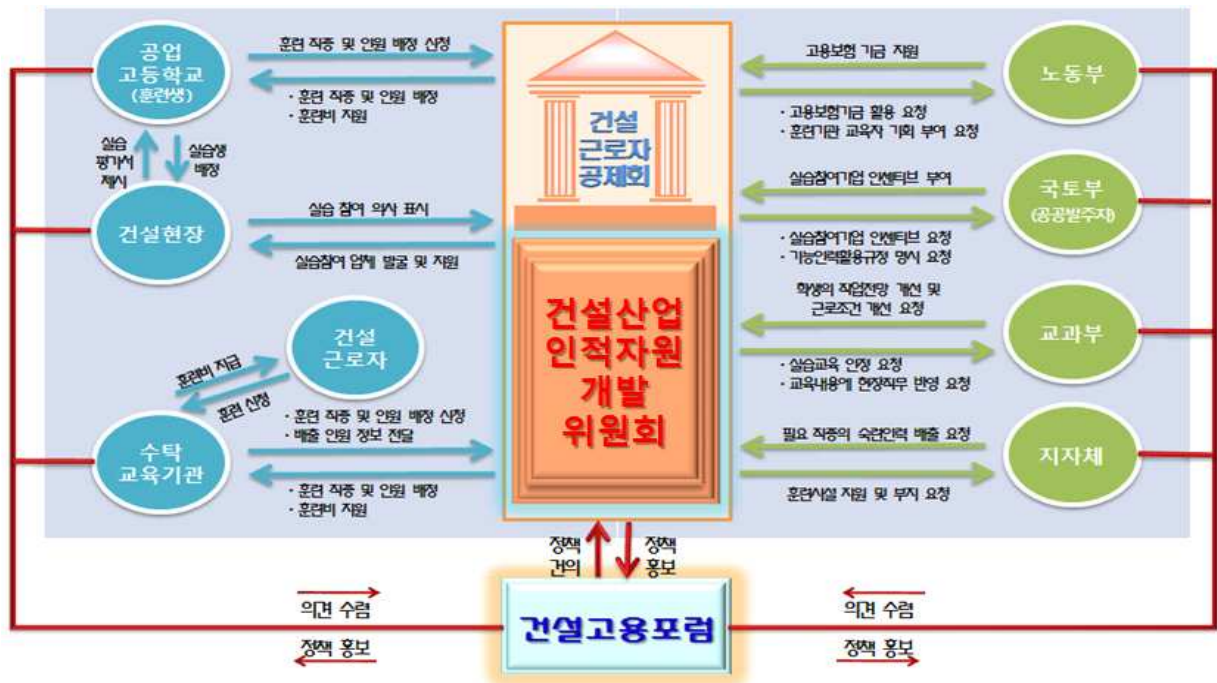
주: (국)은 국가 또는 국가 차원, (산)은 건설산업 차원, (훈)은 교육훈련기관, (사)는 건설사업주, (노)는 건설근로자 또는 교육훈련생 등과 관련된 내용임을 의미함.

1) 본고는 2015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제24회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에서 발표한 논문의 핵심 내용을 번역하여 축약하였음. Shim Gyu Beom(2015), Seeking an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Construction Workers, The 24th Japan-Korea Joint Workshop on the Construction Economy

■ ‘직업전망 제시 및 현장성 제고’로 효율성 극대화 도모해야

- 상술한 3대 핵심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 저가 수주경쟁 억제 장치 마련, 기능인력 고용 인센티브 규정 등을 추진
 - 가칭 ‘건설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현장연계 프로그램 운영, 자격시험 내용 구성 및 검정 등을 담당케 함. 이것은 상시 집행기구로서 설치하고, 공공교육·공공훈련·산업 현장에 대해 건설산업의 노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
 - 건설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 살 깎기 저가 수주 경쟁’을 억제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이를 도급 단계 말단의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미국의 적정임금제도를 참고할 수 있음.
 - 숙련도의 지표로 기능등급(경력+자격증+교육훈련)을 설정하고, 이들을 보유한 건설업체를 우대함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현장 배치기준, 입찰참가 조건 등에 기능등급 보유자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 : 가칭 ‘건설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



심규범(연구위원 · gbsnim@cerik.re.kr)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X)1)

- 서울시 노후 시설물 관리 재원 조달과 정책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

■ 절대 부족한 시 재정과 관련 제도 후진성으로 노후화 속도 감당 못해

-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서 도시 안전 관련 예산 비중은 3.8% 수준이며, 특히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은 1.4%에 불과한 형편임.
 - 서울시 인프라시설물의 노후화가 더욱 악화되는 데 비해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5~19) 중 ‘시설물 안전 예산’은 가장 많이 편성된 2015년 5,522억원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3,841억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약 70%에 불과함.
-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설물 안전 예산은 예산 배정의 변동폭이 크고 일관성이 없어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산 배정의 적정수준 및 우선순위 기준, 예산 집행 후 성과 평가 등을 포함한 시설물 안전 예산 관련 전략 및 절차 수립과 이를 보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확립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인프라시설 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의 안정적 투자를 담보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안전 특별회계(이하 ‘시설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조례로 제정함.
 - 시설안전특별회계는 서울시 인프라시설물의 안전과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회계이고, 대상 시설물은 도시의 기반시설물인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하천,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정함.
 - 안정적 세입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용. 기존 일반회계 중 도로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관리, 재난대비 관리 등 시설물 관련 예산은 시설안전특별회계로 전입
 - 초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규 건설사업의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시설안전기금’이 설치되며, 시설안전특별회계로 전입됨.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공동 수행한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제525호(2015. 8. 24 발간)부터 10회로 나누어 부문별로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제537호(2015.11.23)에 이은 마지막 10회차임.

-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새롭게 도입된 RTO/RTL²⁾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자사업 수행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제반 세부 지침과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³⁾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의 조사 및 설계 등의 업무에 대한 예산은 시설안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는 2015년까지 3조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한 ‘안전투자펀드’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국가재정지원의 평가 기준으로 ‘지자체 인프라시설물의 노후화 수준’도 포함할 것을 중앙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야 함.

■ 서울시 인프라시설물 안전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속가능한 서울시 인프라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를 제안함.
 - 서울시 인프라시설물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을 총괄하는 ‘Control Tower’의 기능을 가진 조직을 서울시 집행부 내에 발족하고, 시의회 내에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설립 및 운용함(영국의 Infrastructure UK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
 - 인프라시설물의 성능개선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계량화된 정책목표⁴⁾를 설정하고,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기준, 사업계획 기간별 중점 목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후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프라시설물 종합 정비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함(일본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
- 시민과 중앙정부에 서울시 인프라시설물의 실태를 알려주는 ‘서울시 인프라시설물 평가 보고서(Seoul Infrastructure Report Card)’의 정기적인 발행이 필요함.
 - 미국 토목학회(ASCE)는 1988년 이후 3~5년 주기로 ‘미국 인프라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주정부와 지자체들도 주민과 상급 기관과의 대화 도구로 이를 활용

이영환(연구위원 · yhleee@cerik.re.kr)

2) RTO는 Rehabilitate-Transfer-Operate의 약자이고, RTL은 Rehabilitate-Transfer-Lease의 줄인 말이며, 민자사업을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포함한 유지/보수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함.
 3) 일례로, 환경부의 설계기준의 상향(지선[5년→10년], 간선[10년→30년])과 수질(총인 방류) 기준 강화(2→0.5ppm)로 인한 하수도 관련 서울시 부담 법정경비 지출이 최근 5년 간 약 1.8배(2,796억원[2010]→4,096억원[2014])로 급증하였다고 밝히고 있음(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 2014.9, 서울시도시안전실).
 4) 예를 들어 5년 간 제방축조공사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침수되는 가옥 수가 6만 호에서 준공 후 4만 호로 감소되는 정량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함.

2016년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 거래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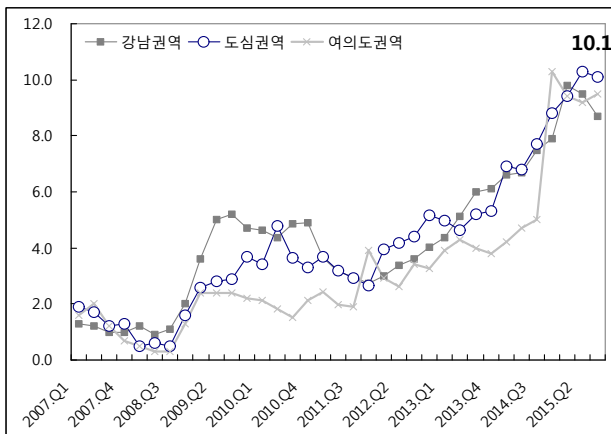
- 투자수익률 하락에도 저금리 영향으로 가격 하락 여력 낮아 거래 성사 어려움 가중 -

■ 2015년 하반기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 : 도심 프라임급 오피스 공실률 상승세 마감

- 2015년 3/4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9.1%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함.
 - 2011년 3/4분기 이후 16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 3/4분기 들어 하락함.
 - 도심권 10.1%, 강남권 8.7%, 여의도권 9.5%, 서울기타권 7.5%을 나타냄. 강남권역에서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공실률이 하락함.
 - 신축 프라임급 오피스 공실률은 하락하였으나, 중형 오피스 공실률은 상승세 지속 중
 - 프라임급 오피스 공실 감소는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큼. 하반기 이후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2016년에도 예년 대비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 등으로 오피스 임대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프라임급 오피스 공급 증가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음.

<서울 오피스 시장 공실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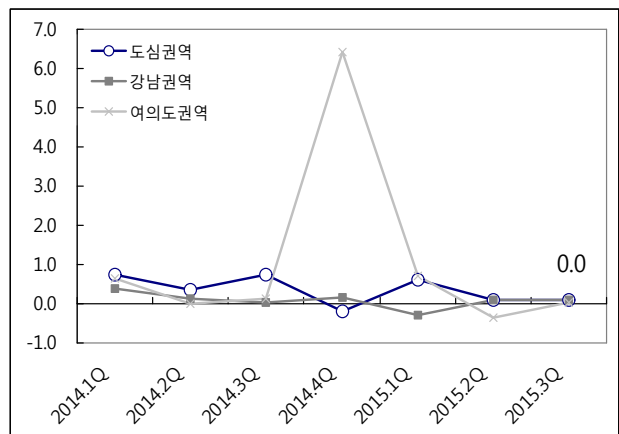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메이트플러스

<서울 권역별 오피스 환산 임대료 변동률(전분기비)>

(단위 : %)



자료 : 메이트플러스

- 서울 오피스의 환산임대료는 보험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무상임대 기간 제공 등을 고려하면 실질 임대료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환산임대료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임.
 - 2015년 3/4분기의 환산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0.0%,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함. 모든 권역에서 0.0~0.1% 수준의 보험세를 보이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특히, IT업체가 주 임차자인 강남권은 비교적 임대료가 낮은 판교 등 기타권역으로의 임차인 유출이 지속되면서 무상임대 기간의 장기화 등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실질 임대료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음.

■ 2015년 하반기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 : 재무구조 개선 위한 매각 및 유동화 사례 많아

- 2015년 하반기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은 4/4분기 이후 대형 오피스 거래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전년 수준을 하회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 2014년에는 연말 간접투자상품의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거래 집중 현상이 나타남.
- 3/4분기에는 중·소형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고 상반기 대비 간접투자 거래가 증가함.
- 4/4분기 현재 순화타워 등 거래가 진행 중인 프라임급 오피스가 10건을 넘어서고 있음. 거래 종료 여부에 따라 2015년 거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나, 전년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시장에 나온 프라임급 오피스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의 비핵심 부동산의 매각 및 유동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함.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부분 매각 이후 일정기간 매각 주체가 임대를 보장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 서울 오피스 시장 : 임대시장 어려움 지속, 매매시장 거래 감소 전망

- 2016년 오피스 공급 물량은 소폭 증가하나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그러나,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의 임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공급은 66만㎡ 수준으로 전년비 증가하나, 예년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임.
 - ※ 2010년~13년까지 서울 오피스 공급은 매년 100만㎡를 상회함.
 -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오피스 수요 회복이 쉽지 않아 임차시장의 어려움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임대시장 약세에도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수익률 하락세가 이어짐. 저금리 등으로 가격 하락 여력이 낮아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2016년에는 오피스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대체상품인 물류센터, 리테일 등으로 상품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허윤경(연구원 · ykhour@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 23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분쟁 조정 안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정책과 주최, ‘CM 제도개선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실장 토론자로 참여
11. 24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과 주최, ‘EWS 지표 점검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10월 지표 및 최근 동향 점검
11. 25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과 주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업계 조찬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발제자로 참여
11. 27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제과 주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TF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적격심사제 개선 등 논의

■ 「민자사업 재무모델 해석 및 응용 실무과정」 교육생 모집

- 일 정 : 2015년 12월 2(수)~3일(목) 16시간
- 장 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 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참가비 : 37만원/인(비환급 과정)
- 문 의 : 기획조정실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 02-3441-0691, 0848)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기획조정실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혼란 부추겨

지난 8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개최한 지 약 2개월여 만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지난 달 28일 발표되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및 조선업종 기업들의 ‘어닝쇼크’, ‘빅배스’ 등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방지하는데 사실상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조치에 담긴 내용들은 건설기업 회계처리에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하나의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길고, 정책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건설공사의 손익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힘든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이번 조치에 따라 공시한다손 치더라도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 제고나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여 건설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기업 회계정보를 담은 회계보고서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업의 수주활동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인 추정총예정원가가 공개될 경우, 건설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건설공사도 다양한 내·외적 환경으로 미래 예정원가를 정확히 산출키 어려운데,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예정원가를 산출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공사예정원가의 공개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건설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주기업들이 적용하는 투입원가율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관행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또한, 금번 조치의 핵심 논쟁이었던 ‘회계감사제’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회계에서 외부 감사기능의 여건상 시기상조다. 기업 회계의 외부 감사기능의 명확한 절차나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도입은 건설기업, 주주 그리고 감사인 등 이해 관계자들 간 책임 소재의 충돌 등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건설기업의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형식보다는 거래실질을 존중하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외부회계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과 기업 공시의 실질적인 강화 및 회계부정을 막는 적극적인 제재와 지도의 강화 등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머니투데이, 2015. 11. 12>

김영덕(건설산업연구실장 · ydkim@cerik.re.kr)